

정부, 나프타 수급불안 막는다 수출제한·매점매석 금지 조치

산업부, 나프타 수급안정 팔 건어
금일 0시부터 5개월간 제한 조치
김정관 장관 “물량 최대한 확보”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불안이 커진 나프타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수출물량을 국내로 돌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시행된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핵심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중동전쟁 직후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을 실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금융지원도 시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수급 불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비어있다. 중동사태 여파로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비닐봉투, 포장용기 등 다양한 1회용품 포장재 품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

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생산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기업에 공급을 지시하는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의 산업발달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도입 등 수급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2030년까지 밀 자급률 8% 달성”

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 발표
품질·수요 중심 정책방향 전환

정부가 국산 밀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기반의 산업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간의 생산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품질’과 ‘수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발표했다. 국산 밀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 생산 체계 구축 ▲고품질 밀 유통 활성화 ▲소비자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구축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밀 재배면적 5만 헥타르(ha), 생산량 20만 톤

(t)을 달성하고 자급률을 8%까지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우선 평가 기준을 기존 단지 규모와 교육 컨설팅 이행을 중심으로 1등급 밀 생산율과 품질균일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시설·장비 지원과 공공비축 밀 물량 배정 등 각종 정부 밀 관련 사업 예산도 고품질 밀을 생산하는 우수 단지 중심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장 컨설팅을 의무화해 재배 역량을 높이고, 기후나 토양과 같이 단지별 세부 특성을 반영한 재배 매뉴얼을 매년 현장에 보급한다. 이를 통해 컨설팅이 밀 생산 농가의 재배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과·제빵용 종자 가격을 최대 60%까지 낮추고, 밀 비축 시 정부매입 가격도 품질에 따라 차등화해 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유도한다. 기후변화 대응 재배

기술 개발과 가공 적성 품종 연구도 병행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지원 기준을 건조·저장 시설 중심에서 ‘블렌딩’ 시설 중심으로 전환한다. 밀 블렌딩이란 단백질 함량과 수분, 재배 지역 등이 다른 밀을 혼합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이를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밀 비축 제도 운영을 개편하고 매입 시 품질별 매입 단가 차등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량 배정 기준도 재배면적과 함께 고품질 밀 생산량과 품질균일도를 추가 적용한다.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홍보사업의 경우 일회성 소비 촉진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세대별·수요처별 맞춤형 홍보, 공공 급식 및 먹거리 관련 정부·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미래차 전환 기업 4000억 지원

친환경차 전환촉진 사업 신청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

고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2% 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시,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손 본다

무선통신 방식으로 혼잡 해소

서울시가 증량이나 노선 신설 같은 물리적 확장 대신 열차 제어 방식 혁신으로 도시철도 혼잡 해소에 나서면서도 안전성과 안정적 운행 기반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하루 5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Communication-Based Train Control)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혼잡도를 평균 2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증량·급행·노선 신설 등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운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과도한 투자 비용이나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시철도 일일 통행량은 2021년 386만5000명에서 지난해 492만5000명으로 늘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도 매

년 상승하면서 일부 구간의 혼잡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철도노선에서 사용 중인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와 관제실 간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열차 움직임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열차 간 운행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약 20% 수준의 수송력 향상과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또 신호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줄이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혼잡도가 160%를 넘는 우이신선선에 무선통신 방식 신호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

장영진 무보 사장, 수출기업 현장 점검

한솔제지 방문… 지원방안 논의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솔제지를 방문해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해상 물류비가 급등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펠프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진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솔제지 본사에서 무역보험제도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무보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보는 지난 10일 사장이 총괄하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기동하고 계약 취소, 물류 정체, 대금 지연 등 총 50개 기업에서 접수된 72건의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85개 기관 에너지 위기극복 동참

경기도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경보발령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지침에서 제외됐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곳을 포함해 남부청사·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이번 5부제에 참

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3월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약 4310대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30여명의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 설치 및 5부제 시행 안내와 제외 차량 스티커 부착을 진행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배부,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북부점 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경우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이 이뤄진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